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82
----------	------

발의년월일 : 2021. 11. 19.

발의의원 : 김태원 · 강민구

김동식 · 김성태

김재우 · 배지숙

송영헌 · 이만규

이진련 · 정천락

하병문 의원(11인)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공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화장장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라. 기 타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2.2.1.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u>제6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u>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여 시민이 다른 지역의 화</u> <u>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u> <u>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u> <u>지원할 수 있다.</u></p> <p>1. <u>대구시 화장장의 공사 및 재난</u> <u>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u> <u>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p> <p>2. <u>대구시 화장장의 예약이 완료</u> <u>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p> <p><u>②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u> <u>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u> <u>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u> <u>망하여 시 외의 지역 화장장에서</u> <u>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u> <u>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u> <u>른다.</u></p> <p><u>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u> <u>료는 타 지역 화장장을 대구시민</u> <u>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u></p>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붙임 2)

관 계 법 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